

2025년 1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음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최미연	11/2	[뉴스특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뉴스04] 자동차 관세 25%→15%...수출시장 멱구름 걷혔다	
김홍태	11/9	[뉴스특보] 5천톤급 이상 핵잠수함 확보 현실화..."건조에 10여년" [뉴스24] 더 빠르고 오래 버틴다...핵추진 잠수함, 디젤잠수함과 다른 점은?	
최미연	11/16	[출발600]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증거인멸 우려" [라이브투데이]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도 진행	
김정원	11/23	[뉴스오늘] 350억불 규모 방산·AI 협력..."제3국 공동진출 추진" [뉴스오늘] "월급 14년치 모아야"...서울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안지연	11/30	[와이드08] 프로야구·콘서트...요새 누가 제 돈 주고 보나요? [와이드08] 이 대통령 "암표 과징금 30배로"...정치권도 대책 발표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있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11/2(일)	최미연	지난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고,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를 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고, 투자 재원은 시장 매입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협력 언급까지 이어지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서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정 외에도 잠재적 리스크 등 더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는 물론, 외교,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자체는 반길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들이 성과 알리기에 초점을 둔 구조로 정책적 비용과 잠재적 리스크,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보다는 정부 당국의 메시지 재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단기적 성과의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교·경제 결정이 갖는 무게와 복합성을 충분히 사고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p>		<p>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가적 보도로 핵잠수함 도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주변국 반응, 예상 소요 비용 등을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전달하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가 아니며 평화적 목적의 방어 전략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p>	
2025 11/9(일)	김홍태	<p>지난 달 30일 뉴스특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몇 안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보유가 자주국방을 위한 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 최소한 4척 이상은 필요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이 문제는 한미 간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특히 5,000톤급 이상 규모, 최소 4척 확보 목표, 2030년대 중반 이후 실전배치 전망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과 현재 협정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이 있다는 중요한 사항을 더 설명했음 좋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계획과 관련해 우리 조선소 활</p>	2025 11/16(일)	<p>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한미 병행제작에 무게를 실은 전문가 토론회 등 다각적 의견을 심도있게 후속 기사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추후 제작에도 충실히 한 입장 반영 예정입니다.</p> <p>최미연</p> <p>지난 1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가 종묘 인근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라며 반박하고,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종묘 재개발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를 찾아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2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려온 지주들은 "정부가 법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을 다루며, 공공정책 보도의 대표적 긴장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묘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 혹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 구도가 아닌, 종묘가 상징하는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미래의 개발과 공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갈등의 현장보다 가치의 조정과 공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층 분석형 보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p>	<p>종묘 개발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포함해 역사, 문화, 정책적 사안이 종종적으로 결합한 복잡한 현안입니다. 애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 장관은 종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라며 반박하고,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종묘 재개발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를 하겠습니다.</p> <p>찾아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2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려온 지주들은 "정부가 법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을 다루며, 공공정책 보도의 대표적 긴장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묘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 혹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 구도가 아닌, 종묘가 상징하는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미래의 개발과 공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갈등의 현장보다 가치의 조정과 공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층 분석형 보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p>
			2025	김정원	<p>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p> <p>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p>

11/23(일)	<p>계기로 K-방산 세일즈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UAE 방산 수출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 기업이 낙점받을 발판을 만든 건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UAE 정상이 100년 동행을 다짐하며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는 방산 분야에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 추진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0억 달러 이상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집니다.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중동에서의 한류 인기를 반영해 K-시티도 조성됩니다. 대통령실은 방산과 AI를 합쳐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K-컬처까지 더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AI, 원자력, 바이오헬스 등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방산분야 MOU 구체화에는 시간이 걸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한-UAE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350억 달러, 나아가 K-컬처를 포함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열렸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했지만, 이것이 확정된 계약인지 기대치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산분야 MOU가 구체화되지 않아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이것이 150억 달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p>	<p>아프리카 순방 가운데서도 UAE 방문은 경제적으로 가치적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 서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행사입니다. 항후 방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후속 성과 등을 상세히 보도할 방침입니다.</p> <p>암표 거래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암표 거래 문제를 짚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암표 가격과 무료 티켓까지 거래되는 시장의 왜곡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청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과금 상황 등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암표는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매 시스템의 취약성이나 플랫폼의 대응 부족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짚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피해를 겪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문제의 실질적 영향이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2025 11/30(일)	안지연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예매가 열릴 때마다 순식간에 매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작 이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티켓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해당 기사는 뉴스프리즘 암표 관련 연속 기사입니다. 정속기사를 통해 암표 실태, 암표로 탈세까지 저지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11. 02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2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졌던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세 협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협안의 새로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대미 투자 협상의 배경과 향후 외교·경제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고,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를 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고, 투자 재원은 시장 매입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며,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던 25% 관세가 15%로 인하됩니다. 이는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는 25% 관세 부담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 결정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술 혁신과 내실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데에 대해서도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협력 언급까지 이어지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서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는 물론, 외교,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자체는 반길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들이 성과 알리기에 초점을 둔 구조로 정책적 비용과 잠재적 리스크,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보다는 정부 당국의 메시지 재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단기적 성과의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교·경제 결정이 갖는 무게와 복합성을 충분히 사고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 정책, 미중 회담 등 외교 협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미·중 정상 방한과 한미 협상,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까지 주요 외교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경주 APEC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협상, 북한 문제, 무역·AI 협력,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이며, 이 대통령은 APEC 의장국으로서 지역 협력 강화 후 의장직을 중국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발언 이후에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만 정책 역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둘러싼 경제·안보 복합 구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협상과 안보 전략이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외교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정부 대응이나 정상 간 이벤트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익을 둘러싼 협상의 경제적 리스크, 국제통상 질서, 외교전략의 상호작용을 분석적으로 풀어내는 심층 보도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실종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스캠 및 초국경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캄보디아 실종 사태의 현황과 양국이 추진 중인 공조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의심 신고는 총 513건으로, 이 중 귀국하지 못한 인원은 218명,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62명입니다. 경찰은 외교부 신고까지 합산하면서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하며, 현재 대상자들의 소재와 범죄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안전 확인과 함께, 시도청 전담부서가 범죄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인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는 "인신매매·마약 등 초국경 범죄 퇴치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로 국민이 불안한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두 보도는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실종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사회적·국제적 문제로 확장해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구체적 수치와 공식 발언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했으며, 정상회담과 국제 공조 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인권 문제나 불법 취업 알선, 온라인 스캠 조직의 구조적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도의 초점이 다소 한국 정부와 국민 불안감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캄보디아의 수사 여건이나 제도적 한계 등 현지 관점을 보완한다면 사건의 본질과 시사점을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향한 특검 조사는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권력기관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공수처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사건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책임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수사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가 전직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입니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건희씨에게 통일교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재확인했고,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과 관련해 2차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한 혐의로 조사받으며, 특검은 그가 내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사법 정의의 형평성과 권리기관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조명한다는 점에서 시사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장면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와 제도적 통제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치적 구조와 제도적 합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은 사법기관 내부의 책임 윤리 문제, 추경호 사건은 민주주의 핵심 철학인 국회의 표결권 침해 문제임에도, 보도는 대부분 수사 일정과 혐의의 나열에 그치며 사건이 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11. 09.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2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합니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달 30일 뉴스특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로 세계 몇 안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은 핵잠수함이 5,0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것으로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최소 4척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이어 실전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실제로 착수를 한다면 실전배치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걸로 본다는 데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형 잠수함은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장보고-III 배치-II' 1번함인 3,600톤급 '장영실함'으로,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배치-III' 모델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해군참모총장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그 규모는 5,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핵잠수함 연료에 대해선 "우라늄 농축 정도는 20% 이하가 될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잠수함 건조 능력뿐 아니라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보유가 자주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 최소한 4척 이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이 문제는 한미 간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특히 5,000톤급 이상 규모, 최소 4척 확보 목표, 2030년대 중반 이후 실전배치 전망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과 현재 협정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이 있다는 중요한 사항을 더 설명했음 좋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계획과 관련해 우리 조선소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가적 보도로 핵잠수함 도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주변국 반응, 예상 소요 비용 등을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전달하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가 아니며 평화적 목적의 방어 전력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뉴스24에서는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과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물속에서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빨라 위협 환경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하다면서, 핵잠수함의 특징과 장점을 전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는 디젤 잠수함이 충전을 위해 하루 두세 번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며, 원자로를 돌려서 핵분열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동성인데요, 일반적인 속도가 5~10노트 정도인 디젤 잠수함에 비해 핵추진 잠수함은 20노트 안팎으로, 두 배 이상 빠른다고 합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은 탐지되면 전속으로 도망갈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전속으로 가면 완전히 축전지가 방전돼 일반 고철 덩어리가 된다면서, 핵잠수함이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탐지가 쉽지 않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추적·감시하기 위해 필수 요소인 잠항 능력과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까지 6개국뿐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필요성을 구체적 비교를 통해 시청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과의 차이점을 속도, 잠항 시간, 생존 능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짚었으며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재정적 부분 등에 대한 분석도 차후에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발 600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를 사칭한 직원을 경제방송에 출연시켜 허위 정보로 땅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 일대의 땅을 시세보다 최대 53배 비싼 값에 팔아넘겼는데요, 한 경제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남성이 등장해 투자전략을 설명하는 것을 전하는 장면을 내보내는데요, 피의자 A씨는 이건 저 뿐만 아니라 복부인, 복남편 이런 분들이 하시는 전략이라면서 확실한 지역만 조언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 없이 사전 대본만 갖고 활동한 가짜 전문가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도 불가능한 세종시 일대의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22억 원을 편취했는데요,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선 즉석에서 시청자들 상담전화를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1,300여 건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업체 대표 등 36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상담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기 일당에 넘긴 방송제작사 관계자들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정보로 다수 피해를 냉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정확한 필지경

보와 직전 거래가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가짜 전문가를 경제방송에 출연시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사기 매매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검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 53배의 폭리, 피해자 42명, 총 22억 원 편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방송 제작업체가 시청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사기 업체에 넘긴 점까지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가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 즉 방송 협찬 제도의 문제점과 출연자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면도 간단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에서 방송 매체의 책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방송 매체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하여 좀 더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라 해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개발 가능성, 실거래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즉석 상담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멘트가 있었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출발600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협력을 다렸다면서 기술 동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편안한 복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주 APEC을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황 CEO는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간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뤄졌으며, '친한 친구'를 뜻하는 은어인 만큼 장소 선정부터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CEO는 두 사람에게 자사의 초소형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Spark)를 선물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장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과 팔을 걸어 술잔을 기울이는 '러브샷'을 연출하기도 한 황 CEO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식사 중간 밖으로 나와, 바나나 우유와 김밥, 치킨 등을 나눠주며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회동 직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로 이동한 황 CEO는 또 한 번 '치맥 친구들'과의 협력을 예고했고, '깜짝 축사'에 나선 이 회장과 정 회장 역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다고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저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데.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에도 들어오고, 로보틱스에도 들어와서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젠슨 황-이재용-정의선 치맥 회동' 보도는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의지를 다렸다는 점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로 이어질 기술 협력 강화의 의미를 부각해, 글로벌 산업 재편 속 한국의 위상과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습니다. '치맥 회동'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친근함을 더한 구성도 좋았는데요, 회동의 상징성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도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적 파급 효과도 알아보고, 향후 방송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의 실제 어떻게 협력이 이어질지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11. 16.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2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겨냥한 정부 TF 가동까지 사법·정치·행정 전 영역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의 비화폰 삭제와 CCTV 영상 선별 제출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10월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군·경찰·경찰·기재부·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각 기관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총리실 TF가 이를 겸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불법 가담이 드러나면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책임 규명 과정을 각기 다른 국면에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적 책임 추궁의 엄정함과 권력과 수사 간의 긴장 국면, 정부 TF 보도를 통해 제도적 정비와 행정적 수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권력 내부의 책임 구조를 비교적 균형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제도 개선의 실질적 효과 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과 민주적 책임의 관점을 보완한다면 더 심층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가 될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울산 화력발전소가 붕괴되면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붕괴 사고의 구조 전행 상황과 추가 매몰자 수습 소식, 그리고 현장에서 이어지는 수색 작업까지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을 진행하여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종자 3명을 발견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 현장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사고 현장에 2명이 매몰돼 있는 상태로, 이 중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며칠 째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얹힌 잔해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진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철골 잔해 사이를 직접 손으로 치우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붕괴 위험 탓에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구조대와 장비, 수색견이 총동원됐지만, 현장 상황이 열악해 구조 작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 화

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재난 초기의 현장성과 수습 국면의 진행 상황을 균형 있게 보여주며, 감정적 호소와 정보 전달이라는 언론의 이중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색의 난항과 유가족의 심경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였고, 구조 재개라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당국의 대응 과정을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도에서는 단순히 구조 지연이나 발파 완료와 같은 사건 중심 서술을 넘어, 재난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허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분석형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현 시대의 도시 개발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상황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종묘 인근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라며 반박하고,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종묘 재개발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를 찾아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2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정부가 법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을 다루며, 공공정책 보도의 대표적 긴장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묘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 혹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 구도가 아닌, 종묘가 상징하는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미래의 개발과 공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갈등의 현장보다 가치의 조정과 공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층 분석형 보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편집시트 발표지연으로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 예정이던 협상 결과가 안보 분야 조율 문제로 미뤄지면서 관세 인하 적용에 대한 협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될 예정이던 ‘택트시트’가 안보 분야 조율 지연으로 발표되지 않으면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적용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올해 3분기 약 4조5천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며, 업계는 적용이 늦어질수록 손실이 누적된다며 시급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안보 쟁점 조율이 길어지자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 간담회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현대차·기아가 손실을 입는 등 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GM은 수익성 악화로 내년 2월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택트시트’ 발표 지연과 그로 인한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다루며,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피해 상황이 중심에 치우치면서, 정부의 대응 전략이나 협상 과정의 투명성 등 정책적 균형감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에는 피해 규모 제시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 구조, 중장기 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까지 다루는 분석형 보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5. 11. 23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3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K-방산 세일즈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UAE 방산 수출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 기업이 낙점받을 발판을 만든 건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UAE 정상이 100년 동행을 다짐하며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는 방산 분야에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 추진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0억 달러 이상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집니다.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UAE 스타케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중동에서의 한류 인기를 반영해 K-시티도 조성됩니다. 대통령실은 방산과 AI를 합쳐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K-컬처까지 더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AI, 원자력, 바이오헬스 등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방산분야 MOU 구체화에는 시간이 걸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한-UAE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350억 달러, 나아가 K-컬처를 포함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열렸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했지만, 이것이 확정된 계약인지 기대치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산분야 MOU가 구체화되지 않아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이것이 150억 달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몽땅 모아도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집값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14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는 약 14배를 기록했습니다. 독립 이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8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집값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10명 중 9명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고령 가구의 대부분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반면, 청년 가구의 대부분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도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자가 보유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당분간은 집 마련 주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심각해지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에 그쳐 정책적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거 정책 방향이나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단순히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보다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상황인데요.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이런 흐름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기준 원칙이 깨지는 역전 현상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상생 금융 확대로 인해, 특정 구간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금리를 내는 구조, 이른바 금융 계급제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사 임원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직접 점검합니다.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508조 원 규모의 금융 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약 70조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용금융이 확산될수록 중신용·고신용 계층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포용금융 확대로 인한 금리 역전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양측의 입장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과 중·고신용자의 역차별 우려를 모두 언급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융 전문가나 정책 당국자의 의견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른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보완되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규제가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간 연장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낡은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 적용 시점은 2029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규제 연장으로 유통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SM이 프랜차이즈 성격을 떠면서 규제의 실질적 이익은 전자 이커머스 업체들과 식자재 마트가 가져갔다고 지적합니다. 당초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였지만 SSM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 사항입니다. 전체 SSM 점포 가운데 가맹점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최소한의 유타리로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몰 연장을 환영하며 원래 취지대로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보도는 SSM 규제 연장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했습니다. 규제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통업계의 우려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측 입장 모두 소개했습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견해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규제의 실질적 이익이 이커머스와 식자재 마트로 갔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얼마나 보호 받았는지, 또는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나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증적 자료가 보완되었다면 규제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학가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연일 논란을 냥고 있습니다.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잘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를 잡아내는 AI 탐지 서비스 이용도 늘었습니다. 표절검사 서비스 카페킬러에 탑재된 GPT킬러는 지난 10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배 늘었습니다. 학생용과 교수용 모두 사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표절률이 줄었다는 결과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준은 못된다고 경고합니다. AI가 쓴 글을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 AI 탐지기 정확도는 50% 이상을 보였지만, 간단한 회피 기법만 사용해도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AI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AI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의미하고, 오히려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맞춤 인재 양성과 평가 방식 도입이 시급한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한국의 인재 부문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전년보다 30계단이나 떨어진 49위에 그쳤습니다. 이 보도는 대학가의 AI 부정행위 문제와 이를 탐지하는 기술의 한계를 균형있게 다뤘습니다. GPT킬러 사용이 급증했다는 데이터와 함께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탐지 기술의 신뢰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여줬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도는 탐지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대학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의 고민이나 시도하고 있는 변화 등을 함께 소개했다면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11. 30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3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예매가 열릴 때마다 순식간에 매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작 이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티켓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암표 거래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암표 거래 문제를 짚었습니다. 예매에 수만 명이 몰린 한국시리즈 6차전 암표는 최고 999만원 까지 치솟았고,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 티켓마저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와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급증했는데요, 현행법이 암표 판매 행위 처벌이 아닌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절은 요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계 관계자는 암표상들이 티켓을 선점해 공연을 즐기려는 팬들이 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암표상들의 그릇된 이익 추구로 애꿎은 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암표에 정치권도 제동에 나섰는데요, 암표 가격이 치솟아 평범한 시민이 제값에 문화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자 '정별적 과징금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는 정부와 여당은 암표 판매 수익금의 최대 30배 수준의 정별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

는데요, 개정안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암표 판매만 금지하면서 암표상의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러한 허점을 뜯어고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예매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암표 거래 문제를 다뤘습니다. 매진이 순식간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정가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사례로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암표 3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암표 가격과 무료 티켓까지 거래되는 등 시장의 왜곡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청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매 시스템의 취약성이나 플랫폼의 대응 부족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짚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피해를 겪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문제의 실질적 영향이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규제 도입의 실효성과 함께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제시했다면 제도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싱 범죄는 전화, 문자 한 통 만으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범죄가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대응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경찰이 피싱 긴급차단 제도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피싱범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킹앱이 설치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4건 중 3건은 최초 연락 24시간 이내에 이뤄지지만 대응이 이보다 느리다고 지적합니다.

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 경찰은 통합대응단을 설치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번호를 중지시키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문자를 피싱 신고 버튼으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에 해당 번호가 전송되고, 경찰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에서 즉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도 녹음이 되어있다면 문자처럼 경찰 제보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단 번호를 추출한다면 10분 안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이며, 모르는 번호는 우선 의심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보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차단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기준 번호 차단 절차의 한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전하며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 휴대전화 화면을 활용해 신고 버튼 위치와 누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고, 동시에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설명 과정 중,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서 이 기능이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신고 과정과 흐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때 신고 과정과 번호 차단 절차의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제도 활

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행자 안전과 이동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도 증가하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주요 교통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는데, 한 시민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평소 위험한 운행에 불안함을 느꼈던 시민들은 단속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불시단속에선 신호위반부터 무면허까지 총 270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PM, 개인형 이동장치도 40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위반 문제를 다뤘습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구간에서 실시한 단속 현장을 통해 인도 주행과 헬멧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실제 단속 장면과 위반 사례 건수를 제시하며 인도 주행이나 헬멧 미착용 등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행자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내며 안전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단속 현장의 위반 사례와 적발 규모를 중심으로 전달하다 보니 관련 정책 변화의 논의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문제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만큼 제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고교학점제 설문조사를 둘러싼 설문조사 결과가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160개교 교사와 학생 1만 1천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64.2%, 교사 76.3%가 만족도 긍정에 답한 것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서도 학생과 교사 모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결과에 성명서를 내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교총 등 교원 3개 단체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90%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교원단체들이 교육부 조사에 대해 학생과 교사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유도한 편향된 설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표집 방법과 대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인 만큼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상반된 인식을 조명했습니다.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른바 최성보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전달해 제도 운영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실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학점제를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죄성보가 어떤 배경에서 엇갈린 견해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제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일부 교사와 단체에서 문제로 지목되는지,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는지도 간단히 언급해줬다면 이를 둘러싼 현장의 고민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1월 2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1월 9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1월 16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1월 23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11월 30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